

# “31사단 이전 후속대책 없이 수수방관” 질타

##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이틀째

21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238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는 운영현황 광주시장의 직무 수행 능력과 광주시의 소송업무 처리절차, 문화산업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행정·신뢰성 연속성 없어=이은방(북구 6)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시민들과의 약속과 달리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1사단 이전 문제에 대해 광주시가 31사단을 광주 경계 내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해 놓고 아무런 후속대책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이는 무책임한 행정이다”고 질타했다.

또 광주시가 북부순환도로 한세봉 구간에 대해서도 한세봉을 관통하는 대신 우회도로 개설하는 방안을 수립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당초 노선대로 터널을 설치해서 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반영한 것은 그 동안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처사이며,

## 市 본청 소송업무 변호사 3명에 편중 2012년 이후 문화사업분야 MOU 전무



이은방 시의원



반재신 시의원



김옥자 시의원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은 신뢰성과 연속성을 담보로 하는데 광주시의 주요현안사업들이 시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자주 바뀐다면 광주시의 공신력에 큰 문제가 있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업무 편중=반재신(북구1)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시 본청 기준 변호사를 통해 맡긴 소송 148건 중 127건(85.8%)이 4명의 고문변호사 중 3명에

게 집중했다”고 밝혔다. 전체 의뢰 건수 가운데 고문변호사가 맡은 소송은 139건인 만큼 12건을 제외하곤 3명이 수임한 셈이다.

시는 지난해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2013~2014년 9월말까지, 이들 고문변호사 3명에게 지급한 수임료만 2억9000여만원으로 1인당 역대 최대에 달했다.

시는 수임료 말고도 건강 10만원씩을 주는 자문료로 지난 2013년 1930만원, 지난해 1500여만원, 올 4월 현재 650만원을 지급했다. 현재 시가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민선 6기 출범 뒤 지난해 3명이 추가 위촉되는 등 늘어 현재 7명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 차례

대로 배당하고 있지만, 항소심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1심 사건 변호사를 수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화산업체 투자협약 저조=김옥자(광산 3)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시가 문화산업분야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총 16곳으로 이 중 실투자로 이뤄진 업체는 8곳(50%)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투자를 진행한 8곳 중 3곳이 이미 퇴거를 했고 전체 투자액도 17억원에 불과하다”면서 “더욱이 2012년 이후 문화사업분야 MOU체결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102년 서울의 한 대형 문화산업체 3개사와 2014년까지 268억원을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었으나 실제로 투자한 업체는 1곳, 투자액도 2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겉코사건 이후 사실상 새로운 문화기업체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유망 문화기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실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익기자 cki@kwangju.co.kr

## “호남고속철 2단계 빨리 결론 내달라”

### 전남도, 정부에 요구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 송정~목포) 사업과 관련 노선과 건설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사업의 완공을 위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남도는 기획재정부가 오는 6월 말까지 사업 계획을 확정해야 애초 계획대로 2020년 말까지 2단계 사업을 마칠 수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전남도는 21일 “기재부가 늦어도 6월 말까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계획을 확정해야 실시계획을 거쳐 2017년 착공해 2020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지난 1일 호남고속철도 1단계(광주 송정~용산) 개통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2단계 사업과 관련해 “지역의 의견과 승객의 수요 같은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곧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새누리당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들이 2단계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호남고속철 1단계가 개통한 후 목포역의 이용객이 2배가량 늘어나는 등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과 관련 현재 기재부와 국토부·전남도는 모두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무안공항 경우에 대해서 국토부와 전남도는 광주 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 노선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광주 송정~나주~목포를 연결하고 무안공항은 합평에서 지선화해 운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토부와 전남도는 광주 송정~목포 구간 총 43.9km는 신선을 놓고, 33.7km는 기존선을 보강하자는 안인데 반해 기재부는 합평에서 무안공항까지 16.6km만 신선을 놓고 광주 송정~나주~목포 구간은 기존선을 보강하자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사업비는 국토부·전남도 안대로라면 2조4731억원, 기재부 안으로는 1조3427억원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무·배추 출하조절 시설사업 해남대명유동영농법인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15년도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에 해남대명유동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해남군과 경남 거창군이 사업자 선정을 놓고 막판까지 경쟁했다.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은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과 가격 변동이 큰 무·배추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출하를 조절할 수 있도록 대규모 저온저장 시설과 가공시설(절입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이다. 해남대명유동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까지 2개년에 걸쳐 국비 21억원, 지방비 21억원 등을 지원받아 7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윤현석기자chadol@



경인아라뱃길 달리는 국내 첫 수륙양용버스 국내 최초 수륙양용버스가 21일 오전 인천시 서구 정서진 경인아라뱃길을 달리고 있다. 개인 사업자가 10억을 들여 제작한 버스는 높이 3.7m, 길이 12.6m, 폭 2.49m 무게는 12t으로 일반 좌석버스보다 조금 크다. 260마력의 대형버스 엔진 1개와 같은 마력의 선박엔진 2개 등 3개의 엔진을 장착, 육지에서 최고속도 시속 140km로 달릴 수 있으며 뱃길에서는 10노트(약 18.5km)까지 낼 수 있다. /연환뉴스

## 지난해 광주·전남 지방세 많이 걷혔다

### 아파트거래 크게 늘고 지방소비세율 상향 주원인

지방소비세 세율 조정,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아파트 공급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세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역개발세가 인상되고, 빛가람혁신도시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세수가 늘 전망이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014년

광주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전년인 2013년 1조246억원보다 1947억원이 늘어난 1조 2193억원이었다.

세수가 증가한 주요 요인은 부동산 거래 건수의 증가 등으로 취득세가 전년 3038억원에서 3618억원으로 580억원이나 늘어난데다 지방소득세도 1678억원에서

1923억원으로 245억원이 증가했다. 실제 부동산 거래건수는 지난 2013년 4만7400건에서 지난해에는 5900건(12.4%)이 증가한 5900건이나 됐다.

지난해 전남도의 지방세도 도세 8849억원, 시·군세 8662억원 등이 겹쳐 지난 2013년 7629억원, 8366억원에 비해 각각 1220억원, 296억원이 증가했다. 지방세 징수액이 1516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방소비세 세율이 5%에서 11%로 상향되면서 722억원에, 빛가람혁신도시 내 취득세 증가분(200억원)과 영암·보성 등의 렌터카 업체 유치 취득세 증가분(145억원)이 추가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는 올해 보성, 영암, 함평 등이 렌터카 업체 유치가 나선데다 빛가람혁신도시의 영향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원자력발전 등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의 세율이 2배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올해 245억원 정도를 추가 징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현석·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 사회적 기업·공공근로 연계 추진

### 특산물·미술관 등 대상 차별화된 모델 구축키로

전남도가 민선 6기 브랜드 시책으로 추진중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근로 등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 실·국의 시책을 종합 지원하도록 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시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5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대상지 6곳에 사업과 자원이 풍부하고 주민 공동체가 결성돼 있는 만큼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표 모델을 육성하기로 했다. 기존 자원을 보존·유지하면서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달 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와 합동으로 특산물 등 사업화 가능자원에 대해 현지 조사를 벌이고,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의견을 들어 차별화된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6개 섬에 전담 컨설턴트를 지정해 기업 설립부터 주민 교육까지 맡기로 했다. 전남도는 올해 10개 내외의 모델을 발굴하고, 2~3개를 우선 선정해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2015년 사업 대상지는 여수 남도, 고흥 연흥도, 강진 가우도, 완도 소안도, 진도 관매도, 신안 반월·박지도 등으로, 이들 섬이 가진 숙박시설, 특산물, 미술관 등 시설, 바다낚시 등을 사업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이 있는 완도 소안도의 경우 주민이 주도하는 공정여행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이들 6개 섬을 포함해 해안가에 대한 지속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근로 인원 500명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양수산국이 맡았던 해양쓰레기 수거 업무, 일자리정책실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최종선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도의 브랜드 시책인만큼 각종 사업과 정책을 어떻게 연계해 성과를 높일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다”며 “단순히 예산만 이 아니라 행정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해양생태, 탐방로, 야생화, 어촌문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등 각계 전문가 6명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5월20일까지 6개 섬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 컨설팅과 섬별 여건과 특성 및 고유자원을 활용한 핵심테마를 발굴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영산강권역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영산강 환경사랑 띠 엮기 행사

**일 시** | 2015. 4. 23(목), 9:30~16:00  
**장 소** | 승촌보 등 영산강 일원  
**주요행사** | 환경정화활동, 체험프로그램, 탐방프로그램  
**참석대상** | 지역 민 누구나 참석 가능

\*16. 4(23회) 승촌보로 오시면 누구나 환경·문화·역사가 아우러지는 다양한 행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최**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13개 시·군·구  
**주관** |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16개 민간단체)  
**후원** |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 K water 광주전남지역본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 / 삼성전자(주) 광주사업장 / (주)LG화학 나주공장 / 해태제과

\*사전접수처: 전남 나주시 남고문로 65 / 061-332-1280 / najup21@hanmail.net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